

자유주의적 환경론과 환경정의

최병두*

Liberal Environmental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Byung-Doo Choi*

요약 :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제시되거나 또는 함의된 환경론을 고찰하고, 특히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포괄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이해되는 환경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로크 등의 근대 사상가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여기서 분화된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를 환경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다원주의 및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다원주의들, 특히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등을 자유주의의 한계 극복과 환경(정의)론의 구축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의에 관한 바람직한 개념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하여 최소한 자유주의(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포함)에서 비판적 다원주의로 관심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요어 : 환경론, 환경정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다원주의

Abstract : This paper is to explore critically environmentalism, especially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suggested or implied in theory of liberalism which has bee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contemporary society. It begins with a brief look at liberal perspective in a broad sense, then interprets in-depth the classical liberalism of J. Locke, libertarianism (esp. R. Nozick) and utilitarianism (including cost-benefit analysis)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And finally it considers liberal pluralism and other alternative theories of pluralism, especially communitarianism (esp. M. Walzer), postmodern pluralism (esp. I. Young), and cultural pluralism (esp. C. Taylor)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liberal environmentalism and to find out some clues for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we need to transfer from liberalism (including liberal pluralism) to critical pluralism in order to develop a proper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o conceptualize a desirabl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Key Words :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 justice, liberalism, libertarianism, utilitarianism, pluralism.

1. 서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및 경제 질서를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념은 자유주의

(liberalism)이다. 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는 복잡한 철학적 전통과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도 상당한 차이와 때로 심각한 논쟁이나 불일치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자유주의는 17-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18세기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해방된 시민들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 이념이었던 이러한 자유주의는 그 이후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 자유와 권리, 소유의 효율과 평등을 포괄하는 사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빌전한 자유주의에 기초한 현대 사회에서도 시민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시민적 권리는 억압되고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기본 관심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한 국가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저소득층 (또는 소수 인종) 집단이나 지역들은 환경적 혜택이나 피해로부터 차등적인 수혜나 부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적 불평등이나 부정의가 자유주의 사회의 필수적 양상인가, 또는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 관심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이 사회환경적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 또는 이념적 준거로 제시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주의 사회가 환경문제의 발생 및 해결, 나아가 환경정의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자유주의는 현실세계의 정치경제적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또한 철학이나 사회사상에서 자유주의는 다양한 전통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유주의적 개념이나 주장을 다소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자유주의 자체의 개념이나 유형 구분에 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사고나 방안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유주의적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환경(정의)론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자유주의는 사회활동의 각 영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자유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 현대 자유주의적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존 로크 등의 근대 사상가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여기서 분화되거나 또는 분리된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의 간을 구분하고, 이들을 환경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¹⁾

끝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다원주의 및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다원주의들, 특히 공동체주의의,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등에 근거를 두고 이들이 환경문제에의 접근이나 환경정의의 개념화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가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는 오늘날 환경문제에의 접근 및 해결방안과 관련된 사고와 정책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자유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의)론은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환경정의에 관한 바람직한 개념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하여 최소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에서 비판적 다원주의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환경문제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점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용어만큼 오래되고 포괄적이며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인간을 무언가 자신의 것을 소유한 존재로서 사적 개인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적 소유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근대적 이념의 한 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들의 사적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배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정책이나 방안들이 주로 포괄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러한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철학 및 사회사상에서 다양한 전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실행적 차원에서

사회 각 부문별로 다소 상이하게 해석, 적용되고 있다.

철학 및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방식들도 매우 다양하다. 예로, 사고프(Sagoff, 1988)는 자연-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탈존재론적 또는 칸트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적(utilitarian) 자유주의의 간을 구분한다. 탈존재론적 자유주의는 정의를 결과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연적 권리론, 롤즈(Rawls)의 정의론, 레이건(Regan)의 동물권리 이론 등에서 볼 수 있다.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는 정치의 선(goodness)은 전적으로 그 결과에 완전히 좌우된다고 주장하며, 경제이론, 특히 벤담과 밀즈 그리고 동물해방을 주장하는 싱어(Singer) 등을 포함한다. 벤즈(Wenz, 1988)는 다양한 철학 및 사회이론의 전통 속에서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적하면서, 자유주의를 소유와 덕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일반, 자유지상주의, 효율성이론, 인간권리 및 동물권리론, 공리주의, 비용-편익분석, 롤즈의 정의론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동심원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 외 데이비(Davy, 1997)는 자유주의와 관련된 정의 관을 자유지상주의적(엘리트주의적) 정의, 공리주의적(계약론적) 정의, 그리고 사회적(롤즈적) 정의 등으로 구분한다. 다른 한편, 자유주의는 흔히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사회적 측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전적 자유주의(대표적으로 로크),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롤즈의 사회정의론에서 제시된 자유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이미 연구발표(최병두, 2005)한 있는 롤즈의 자유주의를 제외한 다른 세 유형의 자유주의들 각각에서 환경문제 또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검토보자 한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논의에 앞서 우선, 자유주의가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들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자유주의 이론 및 정책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로크의 정치사상에까지 소급되지만 일반화된 것은 19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장

으로서 다양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지향하지만, 중립성의 가치, 최소 국가개입, 규제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자율적 결정의 합동 소극적 정치의 개념에 기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정의로운 생활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 즉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예로, 분배적 정의를 논의하면서, 고띠에(Gauthier, 1986, 341)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 개인들이 정의롭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 ……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정의가 개인이든 사회든지 간에 무엇이 선인가에 관한 본질적 개념화와 연계되는 것을 부정한다.” 이러한 중립성의 사고는 국가가 선 또는 정의의 속성에 관한 논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립성의 개념과 더불어 다른 여타 자유주의적 개념들은 환경문제의 해결과는 대립적이다. 왜냐하면, 공기, 물, 토양 등의 환경재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환경문제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차원을 놓기하는 외부효과들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보전의 문제는 소극적 또는 중립적 가치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정치로는 적절하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며, 따라서 국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제론자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유방임론자와 개인의 자유나 사적 소유 권리의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방임론자들은 오직 자유 시장 내에서의 사유재산만 지지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예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신봉을 전제로 독점금지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자유방임적 경제학자들은 독점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독점금지법에 대해 찬성한다. 즉 효율성은 완전 경쟁을 통한 자유시장 거래에서 최대화되며, 독점과 과

점의 상황에서는 효율이 낮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최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방임 경제의 핵심은 효율인 반면, 자유지상주의자의 핵심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Wenz, 1988, 8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효율이 최대화될 수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독점과 과점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적 경제론자들은 공공재로서 환경자원의 사유화를 전제로 한다. 즉 공공재가 남용으로 파괴되거나 또는 희소성이 증대할 경우, 이러한 자원의 사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변화를 위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공공재의 사유화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자유방임론자들은 효율성의 보전을 위하여 공공재의 사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논리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화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 사람의 사적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다른 사람의 환경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경우, 자유의 최대화를 근본 원칙으로 삼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양쪽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제공하기 어렵지만, 자유방임론자들은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특히 법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환경자원의 사유화에 관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당성이나 해결책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비용의 발생에 대해 적절한 답이 되질 못하며, 자기 모순적이다. 즉 한 지역의 자연이나 환경의 질은 그 누구의 사적 재산도 아니며, 환경의 퇴락은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수의 (특히 익명의) 오염자들에 의한 외부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의 호소나 피해에 대한 사적 소송에 의해서는 환경퇴락을 막거나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들은 자유주의적 입장들에 대한 매우 피상적이지만 또한 극히 부분적인 언급에 불과하다. 자유주의는 훨씬 더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포섭의 방식도 다양하다.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학

자들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환경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난점을 가지고지만, 환경사상의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가운데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이 자유주의적 원칙의 준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의 옹호론자들도 환경부정의를 만연시키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의 사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의의 개념화와 실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즉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환경부정의가 만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칙을 살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예로, Almond, 1995 참조)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균형이나 조화와 같은 개념들이 환경론에서도 핵심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조화를 위한 필수성은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도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개인들 간 권리와 의무 관계의 자유주의적 준수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환경적 책임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주장은 자유주의가 내재한 이념적 특성상 환경문제를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드셀리트(de-Shalit, 1997)는 “자유주의적 사회는 생태적 태도와 환경철학의 촉진을 위한 비옥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특히 그에 의해 제시된 첫 번째 이유에 의하면²⁾ 자유주의는 타자를 무시하는 극단주의(chauvinism)에 반대하고, 대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틀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사고를 제시한다. ……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타자들에 대한 존중’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철학으로서 자유주의는 국가 극단주의에서 남성 극단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극단주의를 거부한다. 나아가 인간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에 손상을 주는 상황은 비인간적 동물들이나 자연 구성물들을 잘못 대우하는 인간 극단주의라고 비판될 수 있다. 그러면, 자유주의 이론가나 정치가들은 녹색 사고와 생태적 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 ‘타자들에 대한 존중’의 철학이다. 환경적 태도는 비

인간적 동물들, ‘모든 감각적 창조물들’ 또는 심지어 ‘모든 살아있는 객체들’ 또는 ‘생태계’를 포함시키기 위해, ‘타자들’에 관한 사고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de-Shalit, 1997, 8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보편화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의 범위를 이미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는 단순한 의미의 확대 적용이 아니라 그 자체의 논리로도 환경론이나 생태주의를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흔히 환경문제와 무관하거나 또는 생태적 논의에서는 배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즉 계약은 이에 결합할 수 없는 것들(예로, 나무, 바위, 하천, 동물 등)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환경 철학은 서로 관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예로, 헤일우드(Hailwood, 1999)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적 ‘중립성’(neutrality)과 외적 자연의 ‘타자성’(otherness) 간의 유추에 기초하여 이러한 인식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다.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추는 외적 자연(타자로서)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포괄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특히 롤즈적) 접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합한 생태중심적 정치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접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이와 같이 자유주의가 환경론 또는 생태주의와 병존하거나 심지어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유의한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 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결 방안(또는 정책)이 왜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자유주의적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권리와 책임에 의한 환경갈등의 해소, 정당한 봉의 분배에 따른 환경평등,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 개혁 노력들이 왜 현상태(status quo)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타협, 중재, 그리고 공평한 분배 등에 의존하여 자유주의적 절차적 및 분배적 평등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 구조상 차별적이며 지속불가능한 현재의 생산체계를 지속시키는데 불과” 할 것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Heiman, 1996).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보다는 자유주의와 관련된 사상적 전통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자유주의의 환경론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로크의 자유주의에 함의된 환경론

자유주의와 이에 기초한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 권리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원을 이루는 대표적 사상가로 로크(J. Locke)를 들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옹호하고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운동을 촉진하는 등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의 벤담이나 경제적 자유주의의 밀 등 학문 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 자유주의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있다. 그의 사상은 주로 정치학 및 철학적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그의 자유주의적 정치철학, 특히 그의 ‘시민정부론’에서 제시된 주장들을 환경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김남우, 1990; 한면희, 2000; 전재경, 2000 등 참조).

로크의 주장에서 환경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한 부분은 〈통치론〉 또는 〈시민정부론〉(1690)에서 ‘신이 인간에 물려준 자연을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자기 보전을 위한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존재이다. 그리고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일체의 것들은 사람들이 생명의 보존과 안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류의 공유물이다. 그러나 신이 부여한 공유물로서의 대지와 그 위의 일체의 것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존에 대한 권리만으로는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이 욕구는 공유물로서의 세계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될 때 비로소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여기서 문제는 공유물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전유 또는 사유화(appropriate)하느냐 하는 점이다. 로크에 의하면, 이 사유화의 수단이 노동이다. 즉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약이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유일한 재산인 신체에 의한 노동임을 강조한다.

“……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신체(person)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 그리고 그의 손의 작업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이 제공해 주고 남겨 둔 상태로부터 변경시킨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그의 노동을 섞은 것이 되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부가한 것이 되며, 그럼으로써 이것을 그의 재산으로 만든다. 그것이 그에 의해 자연이 놓아두었던 공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의 노동에 의해 무엇인가가 그것에 덧붙혀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공동의 권리를 배제한다.” (Locke, 1996, §27)

이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로크의 정치사상이 가지는 환경론적 함의, 즉 그의 사상에서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 보전을 위하여 공유물로서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그 일부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만들 권리(권리를 가진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연에 자신의 소유인 노동력을 결합시킴으로써 비로소 자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론 ‘로크의 단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이러한 소유권 취득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람의 노동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연상태에서 자연환경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풍부하게 널려 있어야 한다(전재경, 2000, 23).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노동은 자연의 공유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수단이며, 나의 노동에 의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 나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 노동

이 노동의 주체에게 소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김남두, 1990, 162). 하나는 노동에 수반되는 고통(pain)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노동의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value) 또는 산물(product)의 개념이다. 이러한 로크의 노동관은 노동을 인간과 자연 상태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그 자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 노동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노동이 인간의 자기 외화로서 인간 본질의 실현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헤겔이나 막스의 입장과는 대조된다. 가치 창출의 수단이며 이에 따라 사적 소유 권리의 근거로서 노동의 개념은 이후 공리주의자들의 입장과 연결되고 특히 시장자본주의에 적합한 재산권 이론으로 평가받게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 환경 간 관계 및 이를 매개하는 노동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로크는 사실 비인간 환경에 대한 도구적 태도와 가치평가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최초의 이론가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충분한 공유지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사유화가 권리로서 성립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로크뿐만 아니라 흡스, 루소, 칸트를 거쳐 오늘날의 롤즈나 노직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은 특정한 우연적, 역사적 성격이 제거된 상태의 ‘자연상태’를 전제로 그들의 이론을 전개한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을 일단 평등한 상태에 놓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결국 국 이 자연상태는 완전한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이론적 관점에서 특정한 성격이 부여된다. 로크는 충분한 공유재산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인의 재산 형성이 타인의 손해 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여기서 충분한 공유재산의 존재라는 조건이 유지될 수 없다면, 이 조건 아래서 타당한 권리의 근거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에 관한 그의 견해는 노동에 의해서만 가치(재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자연 그 자체는 마치 ‘무가치’ 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한다.

둘째, 로크에게 있어 노동이란 그 자체로서 가치 있

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비록 특정한 재산 형성이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생존 기회가 동일한 재산을 형성할 동일한 기회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로 그의 관점에 따르면,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생존의 권리 자체를 확보 받을 수 없게 된다 (Macpherson, 1978, 205; 김남두, 1990, 164 재인용). 로크의 노동관은 이 점에서 생존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사적 소유에 대한 권리와 이에 기초한 정치경제적 질서에 대한 그의 입장은 보여주고 있다. 즉 생존권의 충족을 위해 공유 재산을 노동을 통해 사유화한다는 데서 출발한 그의 이론은 노동을 수단으로 한 가치 또는 산물의 생산과 이의 전유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셋째 로크는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이 거의 무한한 것으로 간주하고, 명목상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한계를 설정하지만, 실제 거의 무한정한 재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로크는 “자연이 세운 재산의 한도는 사람들의 노동의 한도, 삶의 편익의 한도 만큼이다”(§36)라고 재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재산의 한계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신은 모든 사물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 ……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셨는가? 향수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썩기 전에 삶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노동을 통해 재산으로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이든 이것을 넘는 것은 그의 몫 이상이며 타인에게 속한다. 어떤 것도 인간이 썩이고 파괴하라고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없다”(§31). 이와 같이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① 사람이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③ 그가 노동할 수 있는 만큼, ② 자연물을 썩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④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등이 그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설정과 이에 기본적으로 전제된 노동을 통한 사유화에 관한 로크의 언명은 루소의 경우처럼 ‘생존을 위한 필요’에 기초하여 개인 재산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노동을 통해 개인에게 상당한 양의 재산이 축적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남두, 1990, 166).

넷째, 로크는 왜 사유재산제도만이 인간 생존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특히 토지의 공유적 특성을 무시하고 철저한 사유화를 강조하고, 토지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에 의해 소유자격이 주어지고 소유권이 주장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그는 “재산권에서 중심문제가 되는 것이 땅의 과실이나 그곳에서 부양되는 짐승이 아니라 땅 자체이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토지가 개간되고 개량되고 경작되는 경우 버려져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가치를 놓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그의 노동에 의해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의 공동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에어커의 울타리가 쳐지고 경작된 땅에서 사람들의 삶의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생산된 식량은 꼭 같이 비옥하나 버려진 채 공유지로 남아 있는 땅에서 보다 열배는 많기 때문이다”(§37).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공유재산이 사유화된다고 해도 사유화에 의해 많은 효용이 산출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존 기회가 확보되거나 또는 개선됨에 의해 원래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로크의 주장에 의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발현하게 되며,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로크의 자유주의적 토지관은 기본적으로 환경론자나 생태주의자들의 견해, 대표적으로 레오폴드 (Leopold, 1968, 223-4)의 다음과 같은 서술과는 대조된다.

“토지에 대한 사랑, 존경, 숭배,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높은 존중 없이 토지와의 윤리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나로서는 생각하기 불가능하다. 나는 물론 가치라는 용어로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도 훨씬 넓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가치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생물적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옳다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을 때 이 일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여기서 토지 그 자체의 가치 또는 나아가 생물적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이 자연에 내재하는 성질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토지의 가치나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자유주의가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연생태계로의 연장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그 옹호자들은 토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자유지상주의의 환경론적 합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사회의 가장 우선된 덕목으로 신뢰한다. 이에 의하면, 내가 부당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특히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만든 법이나 관습 또는 계약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자유지상주의는 많은 원류들을 가진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고전적 사상가는 존 로크이겠지만,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과 같은 독립혁명기들의 최소 정부 공화주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 등 18~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이러한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는 노직(R. Nozick)으로, 그의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 내에서 르즈의 자유적 평등주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우선 자유지상주의의 일반적 입장을 간략히 살펴 본 후, 노직의 견해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자유지상주의는 무엇보다도 자유에 최대 관심을 가지며, 개인의 행동은 가능한 가장 자유롭게 결정된 (즉 강제나 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자유지상주의는 사적 재산의 보장이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적 소유권은 재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즉 “재산권이 없다면 다른 어떤 권리도 불가능하다. 만일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용할 자유가 없다면, 그는 자유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 된다” (Wenz, 1988, 60). 세째 자유지상주의는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결정하는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적인 교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시장(그리고 법정)을 통해 자유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설정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넷째, 자유지상주의는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재산권의 행사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면 사적 소유권의 방어 측면에서 그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특징적으로 강압 혹은 이의 위협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사람들의 생활에 적게 개입할수록 자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최소로 개입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점에서 최소국가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강압과 사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실질적 자유와 형식적 자유를 구분할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한 공식적 제약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형식적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없다면 비정부적인 강압과 사기에 의해 실질적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요컨대, 자유지상주의에 의하면, 최소국가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며, 사적 소유제가 이러한 목적에 필수적이라면, 최소국가는 사적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에 관한 주장들은 노직의 저서, <아니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1974)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이 저서에서 제시된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이론, 즉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그의 입장에 따르면, 최소국가론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에 관한 기획이

며, 소유권리론은 정당한 재산의 획득과 교환이 가장 핵심적 권리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롤즈의 이론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로 대변되는 자유적 평등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는 반면, 노직의 이론은 이러한 최소 국가론과 소유권리론에 기초한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한다.³⁾

노직은 우선 로크의 소유권 이론에 근거를 두고 개인이 가진 권리의 불가침성을 도덕성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는 최종적 분배 결과로 정의를 평가하는 (재)분배적 정의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일정한 결과를 전제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가가 강제로 개입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재분배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즉 시장의 원리)가 선호된다.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서 교환원리의 선호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입장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국가가 정책 등을 통해 개인 상호간의 자발적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대한의 사회적 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권리론적 입장으로, 국가의 개입 없는 교환원리에 입각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당한 상호교환이 자유로운 개인의 기본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노직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효율적 부의 증대보다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장동진 · 김만권, 2000, 196).

이러한 개인의 권리, 특히 소유권리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노직은 재산권 취득의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소유권리론 또는 권리론(entitlement theory)을 제창한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간주된다.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소유가 정당한가라는 점이다. 노직은 이러한 문제를 소유권리론을 통해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로크적 단서(the Lockean proviso)를 끌어들여 자연상태로부터 최초 취득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

시에,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일은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acquisition)에서의 정의’와 ‘이전(transfer)에서의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소유물이 정당하게 취득되었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 소유물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의 정의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된다 (Nozick, 1974, 149–150). 이와 같이 형성된 소유물에 대한 상호 보호를 위한 결사체로서 최소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세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최초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으로, 누구든지 취득 당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어떠한 재화를 취득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가진다. 둘째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으로, 누구든지 이전 당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화를 이전받는다면 그 소유권을 가진다.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 원칙에 대한 교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violation of the first two principles)으로,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원리의 반복적 적용을 통하여 어떠한 재화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Nozick, 1974, 151).

이러한 노직의 소유권리론이 가지는 특징(장동진, 1984; 장동진 · 김만권, 2000)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점은 그의 이론이 사회적 정의를 위한 어떤 정형화된 이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분배에 있어 도덕적 장점이나 사회에 대한 유용성과 같은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형적 원리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설정된 정형적 분배 원칙들이 강요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정당한 소유의 역사적 성립과정 자체가 정당한 분배의 내용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노직에 의하면, 정당한 소유가 성립하려면 소유를 발생시킨 최초 취득이 정당해야 하며 또한 이전도 정당해야 한다. 노직은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로크가 사적 재산권의 정당화를 위해 제시한 두가지 조건을 빌려온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공유물에 일정한 노동을 투입해야 소유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들 역시 사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동질 정도의 좋은 것이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정당한 취득이 성립된 이후, 소유물은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 그 소유권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의 정의 원칙과 이전의 정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원칙이 소유물에서의 부정의 교정이다. 이 원칙은 현재의 소유물 가운데 취득 및 이전 과정에서 부정함이 있었다면 앞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발생했을 정당한 소유의 상황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정의로운 취득과 이전을 전제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자원의 배분에서 정당한 취득과 이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직의 소유권리에 관한 정의의 3가지 원칙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노직은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직의 주장은 롤즈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즉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내용은 그 자체로서 정의롭다는 주장과 절차적 정의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서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즉 노직은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반면, 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의 개선을 고려하는 분배를 주장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최병두, 2005).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그 자체로서 또는 환경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노직의 주장은 어떠한 재산이 원래 공유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어 자연자원과 같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Cohen, 1986). 노직은 사유화가 정당하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연상태

에서 사적 소유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로크의 입장을 도입한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상태의 모든 것을 신이 준 공유물임을 명시한 반면, 노직에게 있어 자연상태의 모든 것은 공유물이 아니라 단순히 주인 없이 존재하는 것들로 간주된다. 만약 자연상태에서 자연의 자원이나 대상물들이 공유물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이 대상물들에 노동을 하여 무조건 소유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저지할 근거가 없다.

둘째, 노직의 주장은, 우리 모두가 자연자원을 전유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분명 자연자원의 총 재고를 독과점적으로 전유하는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Luper-Foy, 1992). 노직은 자신의 소유권리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로크적 단서, 즉 '타인들에게 동질의 수준의 것이 충분히 남겨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질적 이지도 않다. 예로, "만약 재난에 허덕이는 빈민 [지역]의 사람들이 '로크적 단서'에 따라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땅 대신 다른 사회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름진 평야를 나누어줄 것을 요구해 온다면 이들에게 그러한 토지를 나누어주거나 공유해야만 할 것이다"(장동진 · 김만권, 2000, 214). 만약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대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그 자체를 인정해 버린다면,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셋째, 노직의 주장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한 자유교환(즉 시장) 원리의 지지와 재분배(국가)에 대한 반대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시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게 정의로운 분배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실제 시장은 결코 자발적인 교환만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없으며, 또한 사회의 모든 요소에 올바르게 골고루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한정된 자연자원의 상황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들 모두 또는 엄청나 량을 얻는

데 자유롭다면, 그 외 사람들은 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때로 지나친 간섭은 절제되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간섭’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지상주의는 우리가 상호협력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소한 물질적으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당한 간섭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관련된 혜택과 부담의 적절한 배분을 포함하여 ‘정당한 협력’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면희, 1999; 전재경, 2000).

넷째, 노직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이지만, 사적 소유권의 자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정의로의 확장이 전혀 불가능한 논리이다 (Wenz, 1988, 65–68).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이 이러한 수준을 능가할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로, 한 사람의 자유로운 토지 이용의 권리(골프장에서 농약의 과다 사용)가 다른 인접 주민들의 사적 소유(신체나 토지의 오염 피해)에 대한 권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양쪽 권리가 다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자연상태에서 먼저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을 하거나 토지를 선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소유 권리가 주어진다는 주장(즉 ‘선착자 우선’ 원리)은 자원을 전유함에 있어 모든 사람의 자유를 최대화시키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특히 미래 세대가 어떠한 자연자원들을 전유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부정한다.

5. 공리주의의 환경론적 함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전적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덕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옳은 행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른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다는 이기주의와는 대립되며, 또한 행위 그 자체

의 의미에 따라 도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거도 반대한다. 공리주의는 사회의 총량적 이익을 우선하지만,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주의적 효용에 근거하여 주장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에 속한다. 또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도 공리주의 대표적 학자들로서 벤담이나 밀 등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리주의적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이며, 따라서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주장된다. 예로, 벤담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1789) 제1장 ‘유용성(utility)의 원리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한편,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각각의 이익의 총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로 인해 어느 사회집단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잠재적인 보상기준을 통하여 다른 집단이 받게 될 손실과 비교하여 클 경우, 그 행위는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종길,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공리주의가 환경문제 및 자연생태계와의 관계에 응용되고 있는 방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리주의의 일반적 견해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정도 또는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만족을 가져다준다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으며, 유용성에 대한 만족보다도 적은 환경적 비용은 언제든지 감수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 원리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의 차원에서는 근대 이전과 비교한다면 유용한 자원의 개발을 통해 양적인 물질적 성취를 이루어 낸 (그리고 이루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적인 성취는 지구와 환경자원에 대한 무한성의 전제 위에서 쌓아올려진 것 ……이며, 또 인간과 환경의 적대적 또는 일방적 의사소통의 가정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문종길, 2003, 93).

이러한 행복과 고통, 또는 비용과 편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용-편의분석'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Wenz, 1988, 10장 참조). 비용-편의분석은 기본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 측정을 전제로 하며, 특히 인간 중심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지표에 따라 사회에서 한 집단(계층, 지역, 세대)의 이익이 사회의 다른 집단의 손실과 비교하여, 만약 이익이 손실보다 많다면, 어떤 개발 또는 환경 정책(또는 행동)은 사회에 수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얻은 집단이 잃은 집단에 보상할 수 있으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실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리주의의 가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알고 있고, 이들은 일단의 선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로 저소득 또는 소수인종 지역사회에서, 인근에 공해산업이 입지할 경우, 주민들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취업 및 소득 기회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선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보다 괘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환경적 선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지표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적 질의 불평등한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한다” (Hartley, 1995, 282).

공리주의 및 그 환경관은 미래세대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를 세대간의 관계에 적용할 경우 미래세대의 행복도 현재 세대의 행복과 같은 비중을 가진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의하면, 현재세대의 행복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합친 '총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나 정책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른 것으로 판정된다. 또는 이러한 행위나 정책의 결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총행복(총편익)이 총고통(총비용)에 비해 커다면, 이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러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칙이 미래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손실을 확실하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세대의 확실한 이익이나 손실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미래세대는 현재에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행위나 정책이 미래세대에 어떤 이익 혹은 손해를 얼마만큼 미칠지를 알 길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이정전, 1999).

이러한 공리주의를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즉 종들 간의 관계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시도로 싱어(Singer, 1993)를 들 수 있다. 그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고통에 대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동물의 도덕적 평등론 또는 동물권리를 강조하는 싱어의 주장은 공리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실 벤담은 이성적 존재자(즉 인간)뿐만 아니라 폐락과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자 전부(즉 동물)에게 도덕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공리주의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싱어는 이에 따라 공리주의를 인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제들, 예로, 종의 보전, 채식주의, 동물실험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물론 공리주의는 국가간, 세대간, 그리고 종들 간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싱어의 동물권 이론에 근거를 제공하지만, 공리주의 자체가 동물에 대한 고려를 함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리주의의 이론은 이해관계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사고를 중심으로 하며, 따라서 상이한 가치의 개념을 쉽게 적응시킬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Almond, 1995, 6).

이러한 공리주의와 이에 근거한 환경론은 아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지만, 오늘날 국가의 주요 정책이 환경문제와 충돌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충하기 위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이론 또는 방법이 되고 있다. 달리 말해, “다른 윤리이론에 비해 유독 공리주의에 이처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 아마도 공리주의가 실제로 많은 이론적, 실천적 약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타당한 윤리이론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되기도 한다(정원규, 2004, 273). 그러나 공리주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

공리주의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행복(편익)의 극대화 및 고통(비용)의 극소화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편익이나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즉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총량적(순)행복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수의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를 유발하고 심지어 이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는 소수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지만, 공리주의가 이러한 보상의 자발성을 필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공리주의는 개체들 간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도 좋다는 결론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 체계 하에서는 전체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시킴으로서 결국 누구도 행복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정원규, 2004, 280).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의 적용과정, 특히 비용편익분석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 가치의 측정 또는 효용의 계산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환경의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적, 특히 경제적 관점(화폐적 척도에 의해)에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 계산은 효용 또는 만족도에 관한 수치적 가치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치화될 수 없는 경우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개발에 따른 이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의 현재적 상태는 주로 상품화된 가치로 파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적 철학을 배경으로 발달한 비용편익분석 기법은 “환경의 가치에 대한 전형적인 인간중심주의 가치, 효용성 또는 만족을 측정하려는 수량화의 기획 그리고 인간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만족과 후생을 극대화라는 신념이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문종길, 2003, 85).

이러한 환경의 가치 평가 또는 효용 계산의 문제를 미래(세대)에까지 확장할 경우 공리주의적 환경론의 문제는 더욱 커진다. 즉 공리주의는 효용의 계산에 있

어 보다 확실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먼 미래에 발생할 효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 물론 환경관련 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단기간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미래를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을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미래의 가치를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재세대의 입장에서 계산한 것이 된다.⁴⁾ 즉 공리주의의 입장에 따를 경우, 미래에 발생할 매우 큰 편익이나 비용이 단기 이익을 위해 간과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매우 표피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환경관련 정책들이 선정되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나 순편익은 단지 임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하겠다.

공리주의를 동물 및 자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확장시킴에 있어서도 문제가 유발된다. 싱어와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궤적적 측면에서만 동물의 입장장을 고려하여 인간과 동물을 감성적인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주장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과 동물 간에는 윤리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이성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의식적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아니한 동물들을 무조건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생태계에서 동물을 넘어 자연구성물 일반에 까지 확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즉 공리주의는 감성적 동물들에게 배타적 관심을 보이는 반면 자연환경의 비감성적 구성물들을 관심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생태적 정의의 이론화를 위해 응용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즉 “공리주의는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들 – 나무, 식물종과 동물종, 산지, 호수, 강, 토양 –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의의 조정자로 기능하기에는 부적절하다” (Wenz, 1988, 199).

이러한 문제점들 외에도,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지지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사적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선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 비판에서처럼 행복과 선호의 충족을 위해 사적 소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환경재들은

공공재로 보전되고, 공동으로 이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예로 특정한 토지의 배타적 소유와 이용은 비록 환경의 관리에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차단시킴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오히려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보더라도 상충되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특정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책임’(negative responsibility)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요구하는 과도한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⁵⁾

6. 자유주의적 환경론을 넘어서

1)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그 대안들

자유주의와 이를 응용한 환경론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및 이를 극복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다원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 1980년대 미국에서 많은 주요 환경단체들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에 안주하면서, 와싱턴 DC에 대표사무실들을 두고, 그들 자신을 많은 이익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이러한 주류 환경단체들은 자체의 견해, 즉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결정과정에의 접근은 중대했으며, 회원과 기금이 확대되었고, 성장한 주류 환경론자들은 이 과정에 여러 매듭들에 투입되어, 성공적인 타협을 끌어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적 모형은 클린턴과 고어가 1992년 선거에서 이겼을 때 절정에 달했다. 관례적 다원주의의 모형에서 한 이익집단으로서 주류 환경운동은 가장 성공적인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환경운동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성공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조직의 모형과 운영 면에서 점차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비판은 환경론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결여”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비판은 미국에서 새로운 환경운동, 즉 환경정의운동의

발단이 되었다(Schlosberg, 1997, 272–3).⁶⁾

기존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대표적으로 Dahl, 1961, 1967 참조)에 의하면, 사회는 상호 경쟁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로 구성된다. 예로, 개발업자와 환경보존론자 간의 이해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경쟁의 장에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들은 자신의 조직적 기반 위에서 갈등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로비와 기타 대중 동원활동을 수행하며, 이해관계가 잘 조직되고 풍부한 자원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집단은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법이나 제도적으로 조정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는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집단들 간에 동원가능한 자원의 차이, 조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실제 이해관계의 균형이 아니라 갈등관계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모형이나 실행에는 인종적, 문화적, 이념적 또는 계급적으로 형성된 소수들에 대한 배려는 완전히 무시되게 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한편, 환경이론 및 실제 운동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 환경정의운동은 “관례적인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모형과는 아주 상이한 조직형태, 의사소통방식 그리고 제도적 설계들”을 전제로 한다. 즉 “새로운 다원주의의 탄생은 환경문제의 서로 다른 이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전에는 배제되었던 입장들에 대해서 정치적 과정을 열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조직 형태는 여전히 다원주의이다. …… 사고와 실천들은 다원주의적 이론의 앞선 견해와 보다 최근의 견해 양자 모두를 반영한다. 게다가, 이 다원주의 형태는 관례적 모형의 한계점들에 대한 치유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권력, 자본, 그리고 환경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의 속성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Schlosberg, 1997, 270–1). 이와 같이 일군의 환경론자들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다원주의, 즉 ‘비판적 다원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선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성의 결여라는 이슈를 새로운 차원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주류 환경운동조직의 백인중심, 중상위계층적 속성에서 벗어나서 소수 유색인과 도시거주자들의 협의체로 전환하며, 또한 운동의 이슈로서 자연, 야생, 멸종위기의 종 등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주류운동 이슈에서 저소득 유색인 지역 사회의 사회적 및 환경적 이해관계에 관한 이슈, 예로 독성, 공공보건, 환경위험의 부정의한 배분 등을 문제 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 운영과 운동 이슈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들은 다양성, 나아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즉 이들은 사람들이나 사물들 간의 차이가 소멸되거나 흡수되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과 수많은 이슈들에 기초한 다양성 속에서 상호 연계와 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환경정의운동은 이론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자유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다원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환경(정의)이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은 크게 3가지, 즉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등을 들 수 있다 (Schlosberg, 1999; 임의영 2003 등 참조). 이러한 3가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들과 앞 절에서 논의한 노작,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평등적 사회정의론으로 잘 알려진 롤즈의 이론

을 우선 간략히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2) 공동체주의적 다원주의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온 자유주의적 사회제도와 관행의 부적 합성과 그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공동체주의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이지만 그 외에도 노작 등의 자유지상주의, 나아가 자유와 권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일반이다. 이의 대표자는 월저(Walzer)이며, 그 외 맥킨타이어, 샌델 등을 들 수 있다. 월저는 모든 사회와 제도의 정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정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를 비판하고, 다원적이고 특수적인 상황(또는 영역)들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박정순, 2003 등 참조). 즉 그에 의하면 “정의 원칙 자체는 그 형식에서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선 혹은 가치(social goods)는 상이한 이유에 따라서, 상이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상이한 주체에 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가치 자체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다” (Walzer, 1983, 6).

이러한 월저의 공동체주의에서 요체는 가치의 공유된 사회적 의미 기준과 그러한 기준에 따른 분배적 영역들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복합평등론 또는 다원평등론(complex equality)이다. 즉 그의 정의론에 의하면,

표 1 정의론의 비교

	Rawls	Nozick	Walzer	Young	Taylor
정의론	공정으로서 정의	소유권리론	정의영역론	차이정치론	인정론
정의 원리	차등원칙	자유선택	필요, 공과 등	참여, 자기개발	상호인정
중심이념	평등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다원주의
정당화	원초적 입장	소유권리	복합평등	차이담론	상호주관성
초점	분배	분배	분배	탈분배	정체성
부정의 원인	불평등	권리 침해	지배, 전제	지배와 억압	차이의 보편화

자료: 임의영(2003, 60) (상당 부분 수정했으며, Taylor는 추가함).

각각의 사회적 가치는 오직 어떤 분배적 기준 혹은 방식만이 적합한 ‘분배 영역’(distributive sphere)을 구성하며, 따라서 정의로운 분배는 사회적 가치들과 그 고유한 분배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월찌는 총 11가지의 분배 영역을 제시하고, 각 분배 영역은 분배대상이 되는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의미 이해에 의거한 ‘내재적 원칙’에 따라 분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로, 의료와 같은 복지는 필요에 의해, 부는 자유교환에 의해, 정치권력은 민주주의적 설득력과 시민의 지지에 의해, 교육은 기초 교육이 제공된 후 재능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월찌의 이러한 복합평등론은 각 분배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의 독점과 불평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역간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나 ‘전제’(tyranny)로 변환하지 않으며, 정의의 각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탈중앙화된 다원적 공동체주의와 분권화된 민주적 사회주의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된다 (Walzer, 1983, 318).

월찌의 이러한 복합평등론을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정의론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없었지만, 그의 정의론도 환경론적 합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정의의 영역 구분에서 ‘공간환경’ 분야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제시한 11가지 분배 영역의 하나에 준하거나 또는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해서 그의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자원의 배분에서 인간의 영역과 동물 또는 다른 생태계의 구성원들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정의의 원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인간의 영역에서 자원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나 공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즉 공적 이성)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여나 공과보다는 단일한 필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월찌의 이론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월찌의 정의론은 특수한 공동체의 공유된 사회적 의미에 의존하므로 상대주의적이며 보수주의적이고, 영역들 간에 드러나는 도덕적 불일치를 무시하며, 각 분배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을 방지하고 있다

고 비판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왈찌는 가치의 공유된 사회적 의미 기준은 최소한의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전제하므로 상대주의가 아니며, 현존 도덕에 대한 해석을 통한 내재적 비판이 가능하므로 보수주의적이 아니며, 도덕적 불일치는 포괄적인 해석적 평결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해소되며, 복합평등론은 분산된 인간의 재능이 다양한 분배 영역에서 발휘되도록 하므로 각 영역 내의 불평등이 전반적인 평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대응한다” (박정순, 2003).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논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월찌의 이론은 자유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이론은 “자유주의의 방법론적 기초인 개인주의, 도덕적 보편주의, 권리준거적 의무론, 가치중립성을 거부하지만, 자유주의의 전통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이 사회적 가치들의 공유된 이해에 근거한 공동체주의 정의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친화적이다” (박정순, 2003, 215).

3)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으로 차이와 타자성 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다원주의를 들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푸코와 들티즈 등의 탈구조주의에서 출발하지만, 이들 뿐만 아니라 하라웨이(Haraway)의 주장이나 아래에서 논의할 신실용주의를 주창하는 문화다원주의적 철학자들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포스트모던 정의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영(Young, 1990)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영에 의하면, 기존의 사회정의론은 주로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에만 국한됨으로써, 정치적 결정과정이나 사회적 노동분업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지배되고 억압되는가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따라서 분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배(domination)와 억압(oppression)이라는 측면에서 정의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게 된다.

영(Young)에 의하면, 사회적 정의는 물질적인 가치의 분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한

무형의 가치들을 이론 구성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특히 그녀는 참된 삶(good life)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가치로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과 '자신의 행위와 행위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제시한다 (Young, 1990, 37). 전자가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억압'이라고 하며, 후자가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지배'라고 한다. 이러한 지배와 억압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과 자기발전에 제한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결정과 자기발전을 위한 행위는 자유주의에서 가정하는 추상적이거나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다. 즉 영의 사회정의론의 핵심은 '차이' (difference)에서 찾아진다. 사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이질적 공존'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은 이러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운동의 형태로 '차이의 정치' 또는 '집단 간 차이를 긍정하는 해방적 정치'를 추구한다(Young, 1990, 157-9). 이러한 해방의 정치는 "모든 개인들의 동등한 도덕적 가치, 그리고 권리 및 특권에 관한 모든 제도와 지위에 참여하고 포함될 수 있는 만인의 권리"에 기초하며, 적극적으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조직하고 주장함으로써 지배적인 제도 안에서 참여 기회의 획득을 주요 전략으로 한다.

이러한 영의 포스트모던 정의론을 환경문제에의 접근에 응용될 경우, 사회적 가치의 사적 소유나 기존의 절차적 정의에 바탕을 둔 물리적 자원의 단순한 분배(정의)론에서 환경 이용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특이성(또는 타자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자기참여와 자기개발, 나아가 인간해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될 수 있다 (Low and Gleeson, 1997 참조). 또한 영의 정의론은 환경적 부정의의 역사적 생성과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특히 '권리'에 관한 담론에서 푸리도(Pulido, 1994)는 영의 틀을 이용하여, 환경정의의 개념화는 기존의 분배적 정의론에 기초하기 어렵고, 풀뿌리 단계의 환경적 부정의와 이를 유발한 지배와 억압에 대한 의식의 증대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의 정의론을 환경문제에 적용한 레이크

(Lake, 1996)에 의하면, 사회-환경적 정의란 단순히 배분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분배되어야 할 환경적 부담이 생산되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자기결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센(Hanson, 1998)도 환경정의와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영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배의 정치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의 한계를 비판하고, 차이의 재현을 위한 대안적 환경정의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쉬로스버그(Schlosberg, 2001)는 사회적 정의론에서 환경적 및 생태적 정의론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영(Young)의 정의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차이와 정치적 참여의 개념과 더불어 승인 또는 인정(recognition)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영의 포스트모던 정의론은 이와 같이 환경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비(Harvey, 1992)에 의해 도시계획의 지침을 위한 정의의 5가지 원칙을 제공하는데도 응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영의 정의론에 함의된 주장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도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자에 근거할 경우 영이 강조하고자 하는 정치적 과정에서의 차이와 억압의 문제가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영의 정의론은 보편적 정의 원칙을 거부하지만, 부정의의 개념을 틀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여전히 주장될 수 있으며, 실제 보편적 원칙들이 그녀의 저작에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영의 정의론에서 원칙들은 문화적 차이들의 존중, "사회적 평등", "사회적 제도들에 모든 사람의 완전한 참여와 포함,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그들의 선택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뒷받침된 실질적 기회" 등으로 표현된다(Young, 1990, 173). 또한 물질적 빈곤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배적 정의가 영의 정의론에서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Fraser, 1997). 다른 한편, 영의 정의론에서 승인의 개념이 새롭게 강조될 수 있다고 할

지라도, 정치적 과정에서의 부정의를 문제시하는 그녀의 이론이 자연 세계에 대한 승인의 문제에까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Schlosberg, 2001 참조).

4)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갈래로, 퍼스(Peirce), 제임스(James), 데이비드(Dewey) 등의 급진적 경험주의와 실용주의의 전통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로티(Rorty)와 리오타르(Lyotard), 그리고 테일러(Taylor) 등에 의해 주창되고 있다. 제임스에 의하면, “실체의 구성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된다(James, 1977, 145; Schlosberg, 1997, 276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험에 의한 실체의 재구성은 경험의 주체가 처해 있는 시공간과 사회적 위상의 차이에 따라 다중적이다. 이러한 제임스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단순히 차이의 인정만이 아니라 다른 경험들의 유의성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다중성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로티, 리오타르, 들뢰즈(Deleuze) 그리고 하라웨이(Haraway)등 새로운 비판적 다원주의자들의 핵심적 논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부분들의 희생 없이 정치적 조직의 형태로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슈”를 논하고 있다(Schlosberg, 1997, 277).

예로 ‘처재적 지식’을 강조하는 하라웨이에 의하면,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중적 방법은 개인의 경험이나 맥락의 관점에 의존한다. 즉 그녀는 “객관성은 국지화된 관점에 기초하며, 그 자체로서 다중적”임을 강조하고, “보편성이 아니라 부분성이 합리적 지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건으로서, 입지, 위치지음, 처해짐의 인식론들의 정치”를 주장한다(Haraway, 1988, 589). 이러한 주장은 완전한 상대주의적 입장의 옹호가 아니라, 다양한 위치들이 경험(흔히 공동체적 경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객관론 대 주관론이라는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로티는 경험의 다중성에 근거하여 절대적 진리 개념을 와해시키고 대신 수

많은 진리들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가 세계에 관해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언어 안에서 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상대주의보다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이라고 주장한다(노양진, 2004 참조).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환경문제의 인식과 해결 또는 환경운동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로 공해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위상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모든 이해관계들이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다양한 관점들(또는 위치들)로부터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이해들 모두가 의사결정자적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운동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다원성의 인식을 취할 수 있다.⁷⁾ 동일한 환경문제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들려지지 (또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대안적 환경담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환경정의의 기본 전략이 된다. 즉 린쉬(Lynch, 1993, 110)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환경담론들이 문화적으로 기초지워진다면, 이들은 계급과 인종적 노선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것이다. 사회의 힘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환경적 담론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의의 문제들은 사회에 다양한 집단들에 미치는 특정한 토지이용들이나 환경정책들의 효과들뿐만 아니라, 대안적 환경담론들이 받아들여지고 가치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천명해야 한다”. 환경정의운동은 단일 관점이나 획일성을 부정하고, 차이와 다중적 관점들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다양성을 유의하게 할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Schlosberg, 1997, 276). 나아가 진정한 다원주의에 기초한 환경운동은 “‘들으려는’ 입장, ‘타자성’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이해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하겠다(Low and Gleeson, 1997, 25).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의 견해는 보편주의적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 다원주의적 세계로의 길

을 열어준다. 사실 경험의 다원성은 특정한 이론적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 영역에서 기본적 구조이며, 따라서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철학적 상식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근본적 다원주의’는 절대적 상대주의가 빠지는 허무주의의 함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노양진, 2004).

테일러(Taylor, 1994; 2003)는 이러한 절대적 상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원성을 자신의 철학적 전제로 설정하면서도 보편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정미라, 2005 참조). 그에 의하면, 다원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보편주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루소의 ‘보편적인 상호존중’ 또는 헤겔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의 개념이다. 테일러는 인간이 지난 상호주관적 성격을 토대로 정체성의 형성과 인정(또는 승인)의 문제 간 연관성을 분석한다. 즉 각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주관성에 의존하며,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정체성의 사회적 인정을 중요한 도덕적 요청으로 내세우는 테일러는 상호 인정을 토대로 모든 문화에 내재한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인정의 정치란 각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차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차이들을 모두 다 인정하면서 각자가 [모두] 자기의 정체성을 계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다(Taylor, 2003, 70).

이러한 테일러의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인정윤리학(또는 인정 정의론)은 영의 포스트모던 정의론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⁸⁾ 또한 이러한 점에서 특히 이들의 ‘인정’ 개념을 환경적 및 생태적 정의론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의 인정은 환경적 선과 악의 보다 나은 분배를 위해 필요한 이유이거나 배경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으로 인정을 확장하는 것은 젠더, 문화, 성에 관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인정을 확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Schlosberg, 2001). 그러나 승인의 개념을 자연으로 확장하는 것을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영의 경우는 이러한 인정의 필요성은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테일러나 호네스는 인정의 필요를 개인의 심리적 관점으로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쉬로스버그(Schlosberg, 2001)는 프레이즈(Fraser)가 이들과는 달리 자연에 응용 가능한 틀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인간 사회가 자연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상호주관성을 전제로 한 상호인정이 자연과 인간 사회 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7. 결론

서구 근대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자유주의는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정치경제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초월하여 현대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사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념을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만연한 환경문제의 발생이나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거나 또는 할 수 있는가, 나아가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의 개념화 및 이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자유주의를 전체적으로 부정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尼체는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면서, 이는 인간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즉, 그에 의하면(Nietzsche, 1984, 139: 96; 서영조, 1997에서 재인용).

“자유주의적 제도들은 그것이 완성되자마자 자유주의적이길 멈춘다. 이후에 자유주의적 제도들 만큼 지독하고도 근본적으로 자유를 손상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이 완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남는다. 자유주의는 권력에의 의지를 저해한다. 그것은 도덕으로 승화된 산과 계곡의 평준화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왜소하게, 비겁하게 그리고 향락적으로 만든다. 그것과 더불어 군집동물이 늘 승리한다. 자유주의 그

것은 독일어로 번역하면 군집동물화(Heerden-Verthierung)이다.”

이러한 니체의 주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자연주의적 정의관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학적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과 그 갈래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들이 환경(정의)의 문제에 응용될 때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로크의 사상과 이를 계승한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내재된 환경론적 주장들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자유주의는 인간을 가상적 자연상태에서 합리적 이해당사자로 추상화함으로써 실제 개인이 가지는 특수성들은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토지의 취득이나 이전이 정당하다면 그 소유권리는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토지는 자연에 먼저 노동을 투입한 사람의 소유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관계를 정당화할 뿐이고 실제 토지 나아가 자연환경 일반은 공유물이며 공동으로 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적 자유교환(시장)의 원리로는 환경정의를 보장하기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환경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며, 또한 환경问题是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공적 문제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게 될 공장이 주변 주민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수용 가능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의 보상 요구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특히 화폐적) 보상으로는 충족될 수 없거나 또는 피해를 유발한 공장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줄만하는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자유주의적 입장에 따라 법적 판결에 따라 보상할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한 책임자를 구속할 수는 있지만, 책임자의 구속이 보상을 해주

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한 갈래인 공리주의 역시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정의의 이론화에 적절하게 응용되기에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공리주의의 입장이나 이를 원용한 비용편인분석에서 사회적 총(또는 순)행복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공리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총 행복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수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불이익이나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부정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한 대안으로 비판적 다원주의가 제시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을 보편적 인간을 설정하고 사적 소유 권리를 중심으로 모든 제도들을 획일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지만, 비판적 다원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차이의 정치 또는 인정의 정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제시된 여러 비판적 다원주의라고 할지라도 환경적 정의, 나아가 생태적 정의에 적절하게 응용되기에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원주의는 흔히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지만, 제라스(Geras, 19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진리가 없다면, 정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원주의가 자연 생태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즈(Wenz, 198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물들[나아가 자연의 구성원 일반에 대한 관심이 무시된다면, 환경정의는 완성될 수 없다”고 하겠다.

註

-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들과는 구분되는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 이론과 이의 환경론적 합의에 대한 고찰은 일단 제외하고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최병두 (2005) 참조.
- 2) 그 외 다른 이유로서, 두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그들의 위상, 가치, 사고 그리고 이론들을 비판적 관점”에 둔다는 점에서 환경론을 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주의는 생

태적 태도의 위한 기반이 되는 이유는 그 국내적 정치의 영역에서 …… 교회, 국가, 대규모 산업과 기업들에 반대하여 개인을 옹호하는 전통을 가진다”는 점이고, 또한 생태적 태도가 자유적 사회에 뿌리를 두는 네번째 이유는 국제적 관계의 영역에서 …… 조화와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국제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 3) 그러나 노직은 그 이후의 저서(Nozick, 1989, 17)에서, 자유 지상주의는 짧은 날 관심을 가졌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4) 예로, 석유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150여년 전의 시점에서 석유의 화폐적 가치는 매우 낮았겠지만, 현재세대의 입장에서 석유의 화폐적 가치는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와 미래간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환경보전에 따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가치 또는 역으로 유전실험이나 환경재해 등과 같이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의 빈도는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5) 예로 생화학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입사할 것을 제안 받은 화학자의 경우, “만약 이 화학자가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열정적으로 혼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입사하게 된다면 이 화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윤리적 직관은 입사하지 않아도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만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 화학자는 아마도 사악한 다른 후보자의 입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하기 싫은 일을 감내해야 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정원규, 2004, 279).
- 6) 그 외 이러한 미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환경정의운동의 특성에 관하여, Shabecoff(1993), Sale(1993), Gotthlieb(1993), Dowie(1995) 등 참조.
- 7) 이러한 입장에서 Fan(2004)은 대만에서 핵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환경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8) 인정(recognition)의 정의와 관련된 이들의 주장은 각각 호네스(Honneth, 1995)와 프레이즈(Fraser, 1998)의 주장들과도 일정한 연계성을 가진다.

文 獻

강정인 · 문지영 (역), 1996,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까치 (Locke, J., 169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 김남두, 1990, “자유 재산권과 삶의 평등한 기회,” 철학연구, 27, 153–180.
- 남경희 (역), 2000,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지성사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노양진, 2004,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로티와 리오타르,” 범학철학, 34, 59–82.
- 문종길, 2003, “환경에 관한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의 접근과 한계,” 환경철학, 2, 65–98.
- 박정순, 2003, “공동체주의적 사회비판의 가능성: 마이클 알찌의 논의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30, 211–247.
- 서영조, 1997, “니체의 자유주의 비판: ‘군집동물화’로서의 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1(4), 27–47.
- 송명규 (역), 1968, 모래 군의 열두달, 땅님 (Leopold, 1948, *A Sand County Almanac*, Oxford Univ. Press, Oxford).
- 송무 (역), 1984, 우상의 황혼/ 반그리스도, 청하 (Nietzsche, F., *Der Antichrist / Gotzendammerung*).
- 송영배 (역), 2003, 불안한 현대사회, 이학사 (Taylor, C.,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Anansi, Ontario).
- 이성근 외 (역), 1984, 도덕과 입법의 제원리, 휘문출판사 (Bentham, J., 1789,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 ed. by J. H. Burns and H. L. A. Hart, University of London).
- 임의영, 2003,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47–64.
- 장동진, 1994, “노직의 정치이론: 최소국가론,”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5, 177–199.
- 장동진 · 김만권, 2000,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소극적 자유의 이상,” 정치사상연구, 3, 196–220.
- 전재경, 2000, 환경정의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 정미라, 2005,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 36, 211–233.
- 정원규, 2004, “공리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적 독해 – 공리

- 주의의 사회계약론적 수렴을 제안하며,” 철학, 78, 271-290.
- 정원섭 외 (역),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 영역들, 철학과현실사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ce of Pluralism and Equality*, Basic Books, New York).
-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 최병두, 2001,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공생과 차이로서의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36(3), 292-312.
- 최병두, 2005,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4), 429-449
- 한면희, 2000, 환경정의와 NGO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 Ackerman, B., 1980,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Yale Univ. Press, New Haven.
- Almond, B., 1995, Rights and justice in the environment debate, in D. E. Cooper and J. A. Palmer (eds.), *Just Environments: Intergenera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species issues*, Routledge, London & New York.
- Cohen, G. A., 1986, Self-ownership, world-ownership and equality, in F.S. Lucash (ed), *Justice and Equality Here and Now*, Cornell Univ. Press, Ithaca, New York, 108-135.
- Dahl, R., 1961,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Yale Univ. Press, New Haven.
- Dahl, R., 1967, *Pluralist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Conflict and Consent*, Yale Univ. Press, New Haven.
- de-Shalit, A., 1997, Is Liberalism Environment-friendly?, in R. Gottlieb (ed), *The Ecological Community*, Routledge, New York.
- Dobson, A., 2000, *Green Political Thought*, Routledge, New York.
- Fan, M.-F., 2004, Democracy and environmental justice: the case of nuclear waste disposal in Taiwan, Paper for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54th Annual Conference, 6-8 April 2004, Lincoln. <http://www.psa.ac.uk/cps/2004/Fan.pdf>
- Fraser, N., 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A Postsocialist Condition*, Routledge, New York.
- Fraser, N., 1998, A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19.
- Gauthier, D., 1986, *Morals by 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Geras N., 1995, Language, truth and justice, *New Left Review*, 209, 110-135.
- Gottlieb, R., 1993,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Island Press. Washington DC.
- Hanson, M., 1998, Justice, difference and sustainability: a discussion of I.M. Young's critique in an environmental context, *Conference Proceedings of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http://www.psa.ac.uk/cps/1998%5Chanson.pdf>).
- Haraway, D., J.,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reprinted in 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Routledge, New York.
- Harvey, D., 1992,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588-601.
- Heiman, M. K., 1996, Race, waste and class: new perspectives on environmental justice, *Antipode*, 28(2), 111-121.
- James, W., 1977 [1909], *A Pluralist Univers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Lake, R.W., 1996, Volunteers, NIMBYs and environmental justice: dilemmas of democratic practice, *Antipode*, 28(2), 161-74.
- Low, N. P. and Gleeson, B. J., 1997, Justice in and to the environment: ethical uncertainties and political practi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9, pp.21-42.
- Low, N. P. and Gleeson, B. J., 1998, *Justice, Society and Nature*, Routledge, London.
- Lynch, B. D., 1993, The garden and the sea: US Latino environmental discourses and mainstream environmentalism. *Social Problems*, 40(1), 108-124.

- Macpherson, C., 1978, Liberal democracy and property, in C. Macpherson (ed), *Property: Mainstream and Critical Position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 Nozick, R., 1989, *The Examined Life*, Simon & Schuster, New York.
- Pulido L, 1994, Restructuring and the contraction and expans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915-936.
- Sagoff, M., 1988, *The Economy of the Earth: Philosophy, Law and the Environment*,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 Sale, K. 1993, *The Green Revolution: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1962-1992*, Hill and Wang. New York.
- Schlosberg, D., 1997, Challenging pluralism: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evolution of pluralist practice, in R. Gottlieb (ed), *The Ecological Community*,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70-291.
- Schlosberg, D., 1999,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New Pluralism: The Challenge of Difference for Environmen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Schlosberg, D., 2001,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justice, Paper prepared for the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Annual Joint Sessions, <http://www.essex.ac.uk/ecpr/events/jointsessions/paperarchive/grenoble/>.
- Shabecoff, P., 1993, *A Fierce Green Fire: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Hill and Wang. New York.
- Singer, P., 1993, *Practical Ethics*, Cambridge Univ. Press.
- Taylor, C., 1994,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교신 :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 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이메일 : bdchoi @daegu.ac.kr, 전화: 053-850-4155 Fax: 053-850-4151)

Correspondence: Byung Doo Choi,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712-714, Korea (email: bdchoi @daegu.ac.kr, phone :053-850-4155, Fax: 053-850-4151)

최초투고일 05. 10. 25
최종접수일 05. 12. 20